

“재래시장 지원, 간판정비 보다 노후 전기시설 교체 우선돼야”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8> 전문가 제언



◇최재혁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최 교수는 “경제성을 앞세우는 건설업체들의 마인드, 관리·감독 기관의 전문성 부재, 허술한 제도 등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기동이 내려앉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광주시 북구 평화맨션이나 준공을 앞두고 철거중인 광산구 소촌동 연립주택 등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관련, “70년대나 일어날 법한 일이 2014년에 발생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업체들의 무신경함, 전문성 부

업체는 안전에 돈 쓰고

감독기관은 전문성 갖춰야

족으로 관리·감시에 한계를 드러낸 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 등이 맞물려 시민들이 위협에 노출됐다는 게 최 교수 생각이다.

그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는 만큼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건축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거쳐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부실 시공’과 ‘대중대중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안전 진단 규정을 꼼꼼히 손질하고 서류상 점검에만 그칠 우려가 높은 건축 허가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참사·장성 요양병원 화재·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담양 펜션 화재 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재래시장, 건설 현장 등의 ‘시한폭탄’ 같은 불안함은 달라진 게 없고 여객선·유람선 운항 실태 등도 나아지지 않았고 수십 년 째 수익성만 추구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온 ‘관행’이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드러난 광주 남광주시장 종합상가의 불법 원룸 증·개축 실태의 경우 ‘좋은 게 좋은 거야’는 식으로 수십년째 이뤄져 온 행정·사법·소방 당국의 형식적인 점검과 ‘별일 없을까’라는 안일한 인식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설마, 괜찮을까’라는 낙관주의, 무신경, 무개념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 무대척’ 사고들과 관련, ‘모두가 책임자, 감시자’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나간 사고를 잊지 말고 철저히 분석, 다가올 재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기획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상은 해운대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김 과장은 재래시장 안전 불감증과 관련, 손님을 끌기 위해 간판 정비·주차장 조성·아케이드 설치 등 의외적인 부분에 지원했던 기존 방침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서민들이 비용 부담을 담보로 하는 ‘안전’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발

시물레이션·조례 제정

한빛원전 상시 감시체제를

지난 5월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km에서 20~30

km로 확대되지만 광주의 경우 비상계획구역 범위 밖에 있는 실정이다.

방재 대책을 수립할 법적 의무나 근거가 없다보니 방재 대책 수립에 예산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광주도 한빛원전 사고 발생 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피해상황·대피 훈련 등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시물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박 과장 주장이다.



◇김석용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김 과장은 재래시장 안전 불감증과 관련, 손님을 끌기 위해 간판 정비·주차장 조성·아케이드 설치 등 의외적인 부분에 지원했던 기존 방침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세 서민들이 비용 부담을 담보로 하는 ‘안전’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과장은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소방시설 관리·개선 강화

생한 화재건수만 40건으로, 노후화된 전기시설이 상당수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기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전기 간선 교

체 등 전기 선로 정비 및 점포 내 노후한 차단기 교체 등 안전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판 정비 등에 치중하던 시장 현대화 사업도 ▲축광식 야광성능 표지부착 ▲전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구비 ▲시장 내 피난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 표시, 가판대 일률적 관리 등 소방시설 관리·개선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이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모든 국민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책임자라는 자세를 갖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방정부 등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NGO 등도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쟁점과 관심 사항을 파악, 관련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 원장 뿐 아니라 국내 재난 전문가들은 재난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현장을 컨트롤하면

지방 중심 재난관리

지자체가 현장 컨트롤해야

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소방·방재 기능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독자적 현장 대응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재난구조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으니 중구난방식 전문가가 설치고 혼선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가 안전처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정비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지역방재체제 및 대응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예기다.

또 재난 사고를 관련 담당자들만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연립주택 주민들은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아파트에서 불안한 하루를 살고 있다. 주민들은 준공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주택에 건축주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입주,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해 22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역하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12월 5일(금) 철원 무박2일 기차여행
도피안사·고석정·백마고지·제2땅굴

시간	일정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07:00	신탄리역 도착 후 출발
07:30	백마고지/노동당사/도피안사/안보관광(제2땅굴)/고석정 관광
15:30	신탄리역 출발
22:00	광주역 도착

성인/경노 89,000원~ 소아 85,000원~

12월 24일(수) 남이섬·춘천 무박2일 기차여행

시간	일정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16:18	춘천역 출발
22:14	광주역 도착

성인/경노/청소년 85,000원~ 소아 79,000원~